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수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58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1. 14.

발 의 자 : 박수영 · 김기현 · 박성훈
강승규 · 곽규택 · 이현승
나경원 · 백종현 · 이인선
김종양 · 박수민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현행법상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, 범죄의 성질, 지방의 민심,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의 신청을 할 수 있음.

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법관의 기피신청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을 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소위 '판사 쇼핑'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됨. 이에 피고인의 기피신청, 관할이전의 신청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에 의한 고의적인 재판지연을 방지하고자 함(안 제16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).

나.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현행 구속기간 제도를 잠탈하고자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목적으로 관할 이전 신청,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

발생하고 있음. 이에 관할 이전 신청 등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 기간 및 즉시항고, 재항고에 따라 상급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각 결정 후 원심법원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취지임(안 제16조의3, 제92조제3항 및 제4항).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상급법원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의 이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제1편 제1장에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3(소송절차의 정지) 법원은 그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제6조에 따른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, 제14조에 따른 관할지정신청 또는 제15조에 따른 관할이전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상급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1조제1항 중 “決定으로”를 “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으로”로 한다.

제92조제3항 중 “第22條”를 “제16조의3, 제22조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에 따라 항고법원 또는 대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원심법원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소가 제기되는 때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6조(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) ① · 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6조(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상급법원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의 이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<u><신설></u>	제16조의3(소송절차의 정지) 법원은 그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제6조에 따른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, 제14조에 따른 관할지정신청 또는 제15조에 따른 관할이전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상급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第21條(忌避申請에 對한 裁判) ① 忌避申請에 對한 裁判은 忌避當한 法官의 所屬法院合議部에서 <u>決定</u> 으로 하여야 한다.	第21條(忌避申請에 對한 裁判) ① ----- ----- --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으로-----.

<p>② ・ ③ (생략)</p> <p>第92條(拘束期間과 更新) ① ・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第22條, 第298條第4項, 第30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公判節次가 停止된 기간 및 公소제기전의 체포・구인・구금 기간은 第1項 및 第2項의 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 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② ・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第92條(拘束期間과 更新) ① ・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제16조의3, 제22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④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에 따 라 항고법원 또는 대법원이 소 송기록과 증거물을 접수한 때 부터 원심법원에 반환된 때까 지의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</u></p>
--	---